

| 정책발표 |

kfri

한·EU FTA 추진 현황 및 식품분야 대응 방안



장 승 진
농림부 식품산업과

I.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한·EU FTA

최근 지구촌 무역질서의 무게중심이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협정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세계 각국이 WTO·DDA협상 진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다. 협상 체결 국가간 서로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간의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FTA의 적용범위는 상품의 관세 철폐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WTO의 다자간 무역질서가 회원국 간에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반면, FTA는 협상을 체결하는 국가간에 관세를 철폐

폐하는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배타성을 가진다. WTO체제에서는 많은 회원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선호하는 것이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액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대국들이 FTA를 통해 국제무역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무역질서의 큰 흐름에 뒤쳐질 수 없기에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04. 4. 1 발효)한 이래 싱가포르(06. 3. 2 발효), EFTA(06. 9. 1 발효)와 각각 협상을 체결하였고 ASEAN과는 상품무역협정(07. 6. 1 발효)을 체결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미국과 FTA를 타결하여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등과도 현재 협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걸프협력회의(GCC), 중국 등과의 FTA를 위해 공동연구와 같은 선행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한·EU FTA는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경제 동맹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블럭이다. 2006년 우리나라 전체 대EU 교역규모는 794억불에 이르고 수출액은 492억불로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 3대 경제권 중에서도 최대 규모이다. 더불어 EU의 대한 투자규모도 미국보다 많은 405억불에 이르고 있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섬유, 전자 등의 관세수준이 높다. 따라서 FTA 체결시 우리기업에게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미국, 중국, EU와의 교역실적 (06년말 누적기준)

	미국		중국		EU		3대 경제권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	432억불	13.3%	695억불	21.4%	492억불	15.1%	1,619억불	49.7%
수입	337억불	10.9%	486억불	15.7%	302억불	9.8%	1,125억불	36.4%
교역 규모	769억불	12.1%	1,181억불	18.6%	794억불	12.5%	2,744억불	43.2%

* 출처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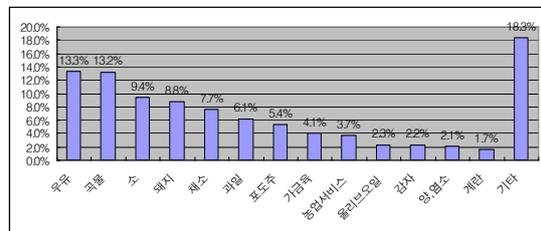
대외경제연구원은 한·EU FTA 체결시 국가총생산(GDP)이 16~24조원(2.02%~3.08%) 증가하고 신규 고용을 30~60만명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우리로서는 EU 국가들이 농식품 분야의 강국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EU측도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결과를 보면 농업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민감성을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표 2. 미국, 중국, EU와의 투자실적('06년말 누적기준)

	미국		중국		EU		3대 경제권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167억불	24.1%	170억불	24.4%	94억불	13.6%	431억불	62.1%
해당국 기업의 국내투자 (FDI)	366억불	28.9%	18억불	1.4%	405억불	31.9%	789억불	62.3%

II. EU의 농식품산업 및 교역 현황

EU는 2004년 기준 농산물 생산액(3,251억유로)이 미국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다. 품목별로는 우유(13.3%), 곡물(13.2%), 소(9.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20%), 이탈리아(14%), 독일(1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EU집행위원회 "Agricultural Statistics 2005"

그림 1. EU의 농업생산 구조

가공식품 분야는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위스키, 와인 등 주류와 설탕, 올리브오일, 제과·제빵류 등의 경쟁력이 높다. 다만, 설탕이나 올리브오일과 같은 일부 식품은 해외시장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에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해외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한·EU 농식품 교역 증가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2003년 9.5억 달러에서 2006년 14.5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EU산 농산물이 10~11%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가공식품의 대EU 수입액은 2006년 6.1억 달러로 국가 전체 가공식품 수입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공식품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대EU 수입액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U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2006년 46백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가공식품의 대EU 수출액도 2006년 17백만 달러로 전체 가공식품 수출액의 1.6% 수준이며 그 품목도라면, 인스턴트커피, 초코렛류 등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표 3. 가공식품 한·EU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수출	전체 가공식품	984,784	998,803	1,015,293
	대EU 수출액	24,453 (2.5%)	20,245 (2.0%)	16,895 (1.6%)
수입	가공식품	1,876,919	2,197,153	2,479,387
	대EU 수입액	483,001 (25.7%)	582,840 (26.5%)	613,331 (24.7%)

출처 : 관세청 무역통계, HSK 221개 품목 기준

Ⅲ. 한·EU FTA 추진 경과 및 협상 대응 방향

지난 2003년 8월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미국·중국과 함께 EU를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이후 두 차례의 예비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5월 1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EU와의 FTA협상 추진을 최종결정했다. EU측과는 이미 3차 협상을 마무리 짓고 10월에 있을 4차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2007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잠정안을 중심으로 양측 입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협상 초기임을 감안하여 향후 일정이나 협정문 작성방향 등 협상의 기본 골격을 정하는 데 양측이 주력하였다. 우선 관세 철폐 일정을 구체화하는 상품분야 협정문에 대한 논의는 우리 측이 잠정안을 제시하여 EU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와는 별도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전 품목에 대하여 양자 세이프가드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허초안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허수준을 높여 작성하되 예외적 취급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1. 상품분야 양허 협상은 진전 없이 3차 협상까지

제2차 협상은 2007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2차 협상에서 정부는 우리측 양허초안에 대한 EU측 반응을 청취하고 관심품목 파악에 주력하면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예외적인 취급이 필요함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EU측은 자국의 양허초안이 모든 품목을 7년 이내로 설정한데 비해 우리 양허초안의 개방수준이 낮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제3차 협상 이전에 양허안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따라서 양측은 각자 양허안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를 감안하여 수정 양허안을 작성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협상은 또다시 2007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제시된 수정 양허안에는 당초 우리가 미정(Undefined)으로 제시한 품목의 관세인하 양허유형을 구체적으

로 제시했다. 다만, 농산물은 그 민감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예외적인 양허유형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외적 유형의 대상품목 범위와 처리 방안 등을 협상해 나갈 계획이었다. 따라서 우리측은 3차 협상이 양측의 수정 양허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EU측이 우리측이 제시한 양허안이 한·미 FTA와 견주어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상품분야 양허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 관련 업계 의견 수렴하여 협상 대응에 만전

EU는 축산물과 주류 등에 관심이 높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최근 종결된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허한 내용과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세 양허의 예외적 취급 범위도 가능한 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측은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셰이프가드나 수입쿼터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협상안 마련에 있어 국회와 농업계, 관련 전문가 그룹의 참여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EU측의 경쟁력이 강하고 우리나라의 수입량도 많아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공식품 품목별로 국내 생산여건, 수출입실적, 관세 철폐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생산이 미미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나 현행 관세가 낮은 품목의 경우 짧은 기간내에 관세를 철폐하여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내 경쟁력이 취약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관세 철폐시기를 최대한 장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EU가 우리나라에 비해 특히 제과·제빵류와 주류 산업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협상력

을 강화하고 있다. 초코렛·제과 등 식품류의 EU 시장 규모는 약 49조원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Cadbury, wrigley, Nestle, Ferrero 등)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관세 조기 철폐시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국내 주류시장도 이미 EU산 포도주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스카치위스키는 거의 전량이 EU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의 관세가 조기 철폐될 경우 국내 주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이들 품목의 한미 FTA협상 결과를 보면 제과·제빵류는 관세 5년내 철폐, 주류 중 포도주는 즉시 철폐, 위스키는 5년내 철폐 등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미국과 EU 상품의 위상과 영향이 서로 다른 만큼 EU측의 요구대로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식품분야 협상과정에서도 식품업계와 협의 해 나가면서 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 농식품분야 지리적 표시 보호도 협상 쟁점이 될 전망

EU는 지리적 표시(GI)를 통한 자국 농식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WTO협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일반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협상에서 EU측은 기체결된 FTA와 차별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협정문을 마련하고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이를 모델 텍스트로 삼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차 협상까지는 아직 상대측 제도에 대한 탐색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협정문 초안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차 협상에서 EU는 주류를 제외하고도 현재 자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치즈, 햄, 소세지 등 743개 농식품의 지리적표시를 우리측에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EU에서 등록·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제품의 국내 보호 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의거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이원화된 상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IV.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정부는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식품산업 생산액이 2004년 109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규모나 기술수준, 브랜드 면에서 시장개방과 함께 밀려들어올 다국적 브랜드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식품산업은 농업의 전방산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다. 식품산업의 위축은 곧 농업생산의 정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림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FTA 확대에 대비한 주요 핵심 정책 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 중장기 식품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로드맵 작성과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식품관련 정책이 주로 산업진흥보다는 식품위생법을 근간으로 하는 위생·안전에 치우쳐 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은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현행 '농업·농촌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새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품기술개발 촉진과 통계조사 등 산업인프라 구축과 식품산업의 집적활성화와 같은 경쟁력 제고 시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유기식품인증제와 같은 품질인증제도 도입, 전통 식문화

의 세계화 등 정책 대상 범위를 과거와 달리 크게 확대하고 있다.

1.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새로 한식 세계화 사업추진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클러스터는 화란이나 덴마크 등 유럽에서 식품관련 연구·지원·생산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단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내년예산에 반영되었다. 식품정책 추진을 위한 농림부의 조직과 인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내에 기존에 식품산업을 담당하던 식품산업과를 2개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국 명칭도 농산물 유통국을 식품을 포함한 명칭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V. 맺음말

FTA는 국가간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다. 부존자원이 미약하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최선의 수단이기도 하다.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길이 곧 국내 수출산업의 성장을 돕고 해외 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효과는 교역증대를 통한 국내생산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경제외적으로도 국가간 교류강화, 국제

적 지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주위의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발빠른 FTA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에 이어 세계 최대경제권인 EU와의 FTA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EU 및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여러 국가들과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우리나라가 FTA 허브국가로서 동아시아 경제대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FTA로 인한 농식품 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